

25 개 단체와 3 명 개인의 성명: 한국의 제 61 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우리 하기 서명 단체 및 개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6 년 3 월 30 일 제 61 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인권이사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 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한국의 오랜 헌신을 재확인하며,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원칙에 기반한 리더십이라는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사회에서 공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한국 내 목소리들이 북한과의 외교, 긴장 고조, 지속 가능한 평화 전망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제기한 우려가 한반도의 미해결 갈등이 빚어낸 불안을 반영한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적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이 유례없이 복잡한 안보 환경을 직면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피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4 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조사기록한 바와 같은 반인도범죄의 중단을 해당국 정부에 대해 촉구하는 것은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책임입니다. 북한 정권이 도발로 간주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이 인권 공약을 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의 논리를 거꾸로 뒤엎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심 인권 조약을 비준하고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할 법적 의무를 수락했습니다. 반인도범죄를 체계적으로 자행하는 것은 주권상 특권이 아닙니다. 타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피하겠다는 약속에 잔학 범죄에 대한 침묵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은 분쟁의 당사자로서 인권 의무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의무를 더 중히 여겨야 합니다. 국제 관행에 따르면 분쟁 관여국들은 침묵이 인권 유린을 고착화하고 향후 정치적 선택지를 좁힌다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 문제를 자주 제기합니다. 한국의 헌법은 북한 정권의 체계적 탄압 하에 살아가는 수백 만 명의 북한 주민을 한국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당사자들이 분쟁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반인도범죄를 다루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권리를 북한 정부가 참여를 거부해 온 과정에 좌우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권, 평화와 안보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중단하고, 대북 관여를 위해 책임규명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원칙 없는 외교였습니다. 이러한 굴종 외교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실질적 개선 기미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1월 한국 정부가 고문, 노예화, 강제실종, 처형이 거의 확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여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정보 통제, 강제송환, 초국가적 탄압을 포함한 북한의 억압 체제는 외부 긴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투명성 부재와 장기적 불안정을 고착화하는 의도적 통치 체제입니다. 단기적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잔한 범죄를 정상화하고 미래의 정치적 선택을 제약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는 단순히 무력 충돌의 부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와 안전이 보호되는 상태로 이해되어야 하며, 인권을 주변화하는 토대 위에서는 구축될 수 없습니다. 한국 평화의 모델로 자주 거론되는 벨파스트 협정은 인권을 평화 체제 이후로 미루지 않고, 바로 평화 체제 내에 뿌리 내리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일관성 부재에 대한 해답은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일관성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부 강대국의 인권 침해를 제대로 문제 제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결국 북한 정권을 어떤 검증으로부터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국은 모든 맥락에서 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20년에 걸친 결의안은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결의를 보여줍니다. 연례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강조하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을 유지하고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기록 작업을 지원합니다. 결의안은 또한 2013년-2014년 기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를 설치해, 지금까지 축적된 것 중 가장 포괄적인 북한 인권 침해 기록을 생산했고, 북한의 반인도범죄 자행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최고대표가 COI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COI 권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출한 2025년 보고서는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판단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 COI 보고서 및 다른 국제적 노력에 최악의 인권침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는 보도는, 원칙에 기반한 지속적 관여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 향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도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유지할 것,
- 통일부의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재개할 것,
- 지난해 해체된 통일부 내 북한인권·인도실 및 납북자 대책팀을 복원할 것,
- 북한을 향한 뉴스·정보의 표적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 특별보고관과 실질적으로 협력할 것,
-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함으로써 북한 인권 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반인도범죄에 관한 COI 조사 결과를 언급하는 문구와, 중국 및 러시아 내 북한 난민·망명 신청자에 대한 정보 보호를 언급하는 문구를 복원하도록 노력할 것,
- 국제 책임규명 기구들의 최근 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COI 권고와 부합하는 가용한 모든 국제 책임규명 메커니즘 방안을 모색할 것,
-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배가할 것.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공동 제안하여 원칙에 입각한 리더십을 시연하고 인권 증진을 지지한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와 감사를 전합니다.

단체:

- Asia Human Rights and Labour Advocates
- Centro para la Apertura y el Desarrollo de América Latina (CADAL)
-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
-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GCR2P)
- Global Rights Compliance (GRC)
- HanVoice
- Helsinki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Serbia
- Human Asia
- Human Rights Foundation (HRF)
- Human Rights Watch (HRW)
-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International (HRWF)
-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CNK)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 Investigation Commission on Missing Japanese Probably Related to North Korea (COMJAN)
- Justice For North Korea
-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 Korea Of All (KOA)
- Liberty in North Korea (LiNK)
- No Fence
-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NKnet)
-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iton (PSCORE)
- Society To Help Returnees From Japan To North Korea
- Song Foundation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 Unification Academy

개인:

- **David Alton**, Co-Chair of the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in the UK Parliament
- **Sonja Bizerko**, Former member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Roberta Cohen**, Former co-chair,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